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정책적 대안 고찰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주노종(rojong55@hanmail.net)

I. 서론

본 논문은 21세기 새로운 경제사상으로서 정치, 경제, 역사, 재정, 외교, 군사, 정보, 과학, 조세, 철학,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우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대체 사고로서 보수적 신자유주의로 재차 발전을 시도하였다. 이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점을 도출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로 까지 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대처수상은 새로운 가치사고로서 신자유주의-대처리즘(New Right)을 주창하였다. 이를 테면, 뉴 라이트운동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혁, 최소의 정부, 자유기업원리를 재차 강조하고, 경쟁을 위한 자율성, 창의성 사회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하는 효율화 정책으로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는 평등주의를 기초로 만민평등주의, 계획경제주의를 기반으로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동시에 초래하였다. 사회주의는 점진적 개혁 사고로서 사회민주주의-페이비안사회주의로 재차 발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진보적 사회주의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20세기말까지 보수주의에 비교하여 정권 획득이 밀리는 양상이 되풀이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과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다양한 전통적 사회주의를 대대적으로 변화하여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New Left)을 주창하였다. 이를 테면, 뉴 레프트운동은 살인적 조세 부과에 의한 강력한 공공서비스정책을 과감히 수정하여 GDP 대비 조세부과와 효

율적 공공서비스지출, 각 개인의 자기계발과 기회확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지방자치와 분권화, 국제협력과 세계화 등 다양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무엇보다도 뉴 라이트·레프트 운동의 정책대안은 세수와 지출에 모아진다.

우선, 기존의 보수주의 정책인 자유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느 정도 시장개입을 인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노사분규, 고비용·저효율, 비대한 정부출현, 사회복지 안정망 파괴, 독과점출현, 시장경쟁원리 파괴로 시장실패·정부실패 등의 비효율성을 발생시켰다. 이는 뉴 라이트운동의 탄생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뉴 라이트운동은 최소의 정부와 작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는 최저수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의 효율성, 자유기업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진보주의 정책인 전통적 사회주의의 사치세, 부유세 등 살인적 세금부과, 만능주의 복지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정책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민주주의·페비안사회주의의 점진적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이라는 유권자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뉴 레프트운동은 기존의 살인적 세금부과와 만능주의 공공서비스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사고로 기존의 선거 전략을 수정·변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정권을 창출하였다. 나아가서 20세기 보수시대를 21세기 진보시대로 지속화시키기 위하여 조세 및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발전적 방향과 이념논쟁에 신선한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II. 신자유주의-대처리즘, 뉴 라이트운동 경제사상

2.1. 신자유주의-대처리즘, 뉴 라이트운동 탄생배경

신자유주의-대처리즘(Thatcherism or New Right)은 20세기 신자유주의(The

neo-liberal) 사상과 19세기 자유주의(The liberalism) 사상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념, 철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으로 탄생되었다.

첫째, 자유주의를 주창한 대표적인 사상가로서는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이 있다. 자유주의는 모든 시민의 존엄성과 사고, 시민권¹⁾을 인정하고 개성과 효율을 바탕으로 자유, 자율, 자발, 창의성에 기초하는 사상이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이어져 미국과 프랑스의 민주화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예크(F. A. von Hayek, 1899 ~ 1992)가 그의 저서 『The Road to Serfdom』 (1944)에서 자유방임주의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철저히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의 경쟁원칙을 새롭게 주창하였다. 하이예크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는 경제전체를 하나로 조직화하려는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의 길로서 봉건시대의 농노의 길, 노예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인 자유주의 사상을 간단히 고찰하여 보면, 전·후기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전기 자유주의 사고는 주로 유럽의 신흥 시민 계급에 의하여 주장된 시민권, 자유경제원리, 민주정치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상이나 행동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19세기의 후기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고,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과 감성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향유하고, 증대시키려고 하는 가치 주관적 생활방식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경제적 자유는 자유방임주의의 시장경제원리로 농업, 제조업, 금융, 상업, 유통, 통신, 감성산업, 운송, 기타 서비스업 등 제 1, 2, 3차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넷째,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자유방임주의 가치사고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1)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민권(the right of citizenship)은 시민의 행동, 이념, 거처,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이다.

경제적 부와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역사 이래 시민의 자유는 최고 조로 향유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산업독점, 노사갈등, 빈부격차, 자원문제, 지역격차, 계층격차, 인종격차, 산업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분출시켰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는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자유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체사상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시민은 개인주의 추구, 사회는 효율화 추구, 경제는 경쟁원리와 자유기업²⁾ 추구, 국가는 국민복지와 공공이익의 역할 등 자유방향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 사상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로서 자유주의가 가지는 인플레이션, 실업, 분배 등 다양한 결함을 인정하고,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정부를 통하여 국가정책과 사회정책의 주요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상이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원리를 철저히 고수하였으나 어느 정도 정부역할도 인정하여 시장지배, 산업독점, 연금·의료·사회복지의 사회안전망 구축³⁾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상이다.

넷째,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이상주의로서 개인주의를 기초로 합리성, 투명성과 효율성을 창출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으로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섯째, 신자유주의는 철저한 경쟁원리 도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쟁으로 인한 자유주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논리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등 공공부문에서 비대화로 비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말았다.

끝으로, 신자유주의·대처리즘⁴⁾의 뉴 라이트 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문제를 다시 초래함에 따라서 경쟁적 시대상황과 사회적 변화의 조류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2) 자유기업은 타인의 간섭이나 기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효율성과 창의성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하이예크는 "경쟁원칙을 무시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4) 대처리즘(Thatcherism)은 다시 말해서 뉴 라이트 운동(New Right)을 말한다.

첫째, 뉴 라이트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예기치 못하였던 정치, 경제, 사회의 비효율화로 사회주의자들이 예상한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다시 초래하게 되자 경쟁화, 효율화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대체사상과 경쟁적 시대상황의 조류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둘째, 뉴 라이트운동은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방식의 정부간섭을 인정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로 자본주의의 위기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자 효율화와 투명으로 최소의 정부, 개인의 가치와 가족의미부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변화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셋째, 뉴 라이트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였던 정부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비효율화와 경쟁력 저하에 의한 다양한 문제점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의 경쟁화, 효율화, 투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경쟁사회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은 신자유주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의 대처수상이 탄생시킨 경제사상이다.

대처수상은 자유를 비효율적으로 누리는 사회가 아닌, 개인과 가족이 우위에서 경쟁과 효율을 다지고 사회를 효율화시키는 새로운 사상운동을 탄생시킨 것이 뉴 라이트운동인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이 결합하여 탄생시킨 영국식 신자유주의로서 뉴 라이트운동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은 20세기 후반 영국에서 만성·고질적인 노사분규, 공적·사적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강하고 비대한 정부출현, 사회복지 안정망 파괴, 산업·상업·금융독점, 시장경쟁원리 파괴로 시장실패·정부실패의 악순환 등 경제사회적인 만국적인 영국병을 초래하였다.

영국의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10.13 ~)는 1979년 수상(1979.5.4 ~ 1990.11.28)에 취임하면서 영국병을 치유하려는 경제사상으로 신자유주의를 재정립하여 현실개혁운동으로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의 경제사상으로서 뉴 라이트운동은 영국병을 치유하는데 극약 처방전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뉴 라이트운동은 대처수상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실패·정부실패를

재차 시장원리로 내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제사회구조, 행정부문, 공공부문 등 구조적 시스템을 강력하게 개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둘째, 뉴 라이트운동은 작은 정부로의 재설정과 공공부문에서 비대한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민영화, 민간기업으로 전화시켜 시장경제원리와 자유기업원리의 효율화논리, 창의성논리로 전환하였다.

셋째, 뉴 라이트운동에서 사적부문개혁은 한계기업의 정리와 빅딜, 빅뱅, 노사 부문개혁, 유연한 고용관행정리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경제체질을 변화시켜 시장경제원리와 자유기업원리의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화논리로 전환하였다.

2.2.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의 정책적 대안

신자유주의 견해는 자유 정치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권에 대한 개념은 개인자유와 근본주의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견해에서 “자유는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자유에 대한 근원적 가치는 작은 정부 또는 최소한의 정부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은 “정부의 역할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시민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뉴 라이트운동에서 정부의 역할로서는 개개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불간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사상은 경제운영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며, 그런 점에서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실행에도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처는 새로운 사상개념으로서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에 대한 이상으로서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사회에서는 사회로서 가치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개인과 가족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대처의 뉴 라이트운동의 표현은 사회로서 가치와 개인과 가족 간의 가치의 표현으로서 “개인이 상호의존적인 공동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거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자유는 항상 모든 것을 우선하여 개인이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 라이트운동은 시민과 정부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요소가 조세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민주체의 시민사회에서 시민권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논의에서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뉴 라이트 운동은 시민권과 조세에 대한 정치적 태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수주의, 진보주의의 사회유형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 라이트운동은 조세정책에서 시민권과 조세의 역학관계를 도시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시민, 개인과 정당, 개인과 정부, 시민과 정당, 시민과 정부, 정당과 정당, 정부와 정당을 연결하는 인과관계에서 가치를 분석하고 있다. 시민권과 조세는 영국과 유럽의 보수당의 정치적 유산에서 가장 명백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조세논의에서 가장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개념사상은 1980에서 1990년대에 새로운 권력정치를 지지해온 시민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뉴 라이트운동은 조세정책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처럼 명명백백하게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테면, *특정의 목적을 위한 조세는 시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강제물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노직(Robert Nozick)⁵⁾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조세는 강제노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조세는 개인이 아닌 정부에 의해 결정된 목적에 개개인의 소득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조세는 강제노역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조세 자유의 날” 옹호자⁶⁾들은 “매년 세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벌기 위해 쓰였던 시간은 탐욕적이고 거만한 정부에 노예상태로 보낸 시간과 같다”라고 주장하였다.

영국, 독일 등 보수당정부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주장하는 만큼 조세를 감세할 수는 없다는데 같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세금이 너무 높다는데 대한 철학적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인용하여 왔다.

뉴 라이트운동의 약점으로서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체성의 부적절

5) 노직(Robert Nozick)의 저서는 『무질서,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 Basic Books, 1974)가 있다.

6)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포되었고 최근에 영국, 유럽으로 건너간 신자유주의 운동의 조세에 대한 캠페인이다.

한 이해이다. 뉴 라이트운동은 생명과 자유, 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자유롭게 말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타당성만을 주장한다. 뉴 라이트운동은 국가적 행위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뉴 라이트운동은 신자유주의자들처럼 국가 보호적 행위의 인식과 필요성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은 최소한의 정부역할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 이념, 사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 1> 뉴 라이트운동은 최소한의 정부역할로서 정책대안

구성부분	정책대안
① 정부부문	·작은 정부, 정부역할 최소화, 지방자치화, 지식정보제공
② 외교부문	·자율적 실리외교, 세계화, 국제협력, 자유주의외교
③ 사회부문	·투명성확보, 강력한 경제적 개인주의, 효율성 사회
④ 시민부문	·기본권, 자유우선, 효율성, 불평등 인정, 개인-가족가치
⑤ 시장부문	·자유시장과 경쟁, 자유기업원리, 경쟁주의원칙-효율성
⑥ 공공부문	·최소한의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민영화 확대와 창의성
⑦ 공공지출	·최소한의 세수입수준에 비례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⑧ 산업부문	·규제완화와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 및 경쟁원리
⑨ 사회안전	·복지·연금·의료의 축소, 최소화, 효율화로 개혁 추구
⑩ 노동시장	·유연성, 자유정리해고, 시장경제원리를 적용
⑪ 기업부문	·자유기업수호, 투자의 자율화, 노사합의의 자율성을 추구
⑫ 분배가치	·차등주의식분배, 분배정의실현, 빈부격차 인정

위와 같은 뉴 라이트운동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소극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법령의 제정, 시행, 집행 등 능력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로서 사법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부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뉴 라이트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정부의 정책 시행은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과 지출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작은 정부모순”이 판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 라이트 운동가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모순”의 실례로서, 러시아 수립 초기를 들 수 있겠다. 1989년 러시아 수립당시에 러시아는 대표적인 작은 정부의 실례를 보여주었으나, 이는 작은 정부위기상황으로서 최소한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과 법을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작은 정부모순”

실례는 시민권에 대한 뉴 라이트운동 견해의 원칙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부가 재원이 부족함에서 오는 오류라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뉴 라이트운동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것이다.

III.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 뉴 레프트운동 경제사상

3.1.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New Left)은 사회민주주의와 페이비안사회주(Fabian Society)의 사상의 다양한 이념, 철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으로 탄생되었다.

우선,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첫째, 넓은 의미로서 사회민주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조류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

둘째, 좁은 의미로서 사회민주주의는 영국 망명생활을 통하여 독일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 ~ 1932)이 수정주의를 시초로 하는 비스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베른슈타인은 사회민주주의의 점진주의 사회주의 운동과 영국식 민주정치를 접목하고 개인이 개혁과 혁신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수정주의(7)를 탄생시켰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임박한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와 계급투쟁과 같은 마르크스-엘겔스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철저히 비판을 가한 최초의 사회주의사상가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고 의회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의 개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7) 수정주의는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사회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논리로서 혼합경제 체제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수정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수정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서 몇몇의 사상가에 의해서 탄생하였다.

베른슈타인의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임무』(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1899)에서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켰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에 퍼짐에 따라 영국사회주의를 정점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져 갔다.

다음으로, 페이비안사회주의는 1884년 대표로서 아일랜드 태생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와 시드니 웨브, 에드워드 피스, 그레이엄 윌라스 등이 영국의 점진적 사회주의단체로서 혁명보다는 점진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면서 “페이비언협회”⁸⁾를 만들어 개혁을 시도하려는 사상이다.

첫째, 페이비안사회주의는 국가체제로서 민주정치,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자보호입법 등 점진적인 정치적, 경제사회적 개혁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사상이다. 페이비안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사회민주주의처럼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을 비판하고, 의회에 의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 의회민주주의 신봉과 시민참여의 점진주의 사회주의 운동이다.

둘째, 페이비안사회주의는 “페이비언협회”와 노동당과의 연계로 사회주의 사상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페이비안사회주의는 “페이비언협회”와 각종 조합, 협회 사람들이 추구한 이상이었고, 소련의 공산주의와 대립하게 되었으며 1989년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 시대에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로서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사회주의로서 페이비안사회주의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는 민주정치로서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려는 의도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유명한 저서 『사회주의에 대한 페이비언적 연구』(Fabian Essays in Socialism, 1889)와 소논문 『사회주의: 원칙과 전망』에서 “사회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저주의 대상이며 수입의 평등한 분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으뜸이며,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따르든 분배문제는 사유재산에 근거한 자유계약과 사적이익

8) “페이비언협회”는 역사적으로 영국 하원의 노동당 출신 의원 중 상당수가 페이비언협회 소속이며, 당 지도부의 상당수도 페이비언 회원이었다. 현재 “페이비언협회”는 전국 규모의 협회와 지부 조직이 20개 이상이며, 국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노동당에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 작용에 맡겨진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페이비안사회주의와 같이 전통적 사회주의(Old Left)로 안착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사상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점진주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운동으로써 많은 발전을 거두었으나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43.5.6 ~)가 이끄는 노동당은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와 페이비안사회주의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진보주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동기의 시발로 간주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개혁의 시도는 1999년 5월 1일 총선거⁹⁾로서 영국식 사회주의 정치를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이며, 전환기로 작용하였다. 당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은 토리당¹⁰⁾의 존 메이저(John Major, 1943.3.29 ~) 수상 집권기간(1990.11.28 ~ 1997.5.2) 중에 발생하였던 다양한 국가정책 사항을 변화시켰다. 토니 블레어의 변화정책으로는 노동당이 사용한 정치논쟁, EU와의 관계, 금융정책, 상업·산업정책, 헌법, 복지개혁, 이민제도, 영국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당의 용어, 어휘로 대체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영국은 당시 정치논쟁에 있어 국민에게 예민한 핵심적 정책분야는 지연양상을 보여주었다. 정치논쟁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과는 달리 진정한 변화라 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노동당의 조세문제는 토리당 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감세와 낮은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였다.

소득세는 기초 및 최저 세율 양면에서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노동당도 토리당 정권과 같이 야당의 세율상승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경기 파급효과가 미래에 불명료한 가를 판단하여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토니 블레어 수상은 21세기 새로운 개인과 시민의식과 시민주체에 기초하는 가치사고와 정책으로의 사회주의 개념을 포괄하고 중화하는

9) 1999년 5월 1일 총선거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43.5.6 ~)가 이끄는 노동당이 당시 집권 보수당인 토리당의 존 메이저 수상과 치룬 선거이다. 이 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수상 취임 1997.5.2 ~)가 이끄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다.

10) 토리당(Tory黨)은 영국에서 17세기 후반에 생긴 보수정당으로서 귀족, 대지주 등을 기반으로 왕권과 국교회를 지지하였으며, 19세기에 보수당으로 이름을 고쳤다. 토리당은 미국 독립전쟁 때에는 독립에 반대한 왕당파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¹¹⁾(New Left)의 뉴 레프트운동을 주창하였다.

우선, 뉴 레프트운동으로서 영국 노동당의 조세정책은 2000년대 초 선거전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다른 정책제시와 경제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조세(실제로 소득세)의 인상정책 또는 인하정책을 공약하고 집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첫째, 선거정책의 관성(inertia)¹²⁾전략은 선거공약으로 증세냐, 감세냐 하는 문제는 경제적 정의를 고려하였다. 페이비안사회주의가 팽배하였던 영국은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노직이 주장한 "경제적 정의의 기본이 되는 사상은 소유의 정의이다"라고 하는 가치 사상과 "경제적 정의의 기준은 사회적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 된다"라는 사상논리에서도 노동당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지속화공약은 공공서비스부문의 차질 없는 수행을 내걸었기 때문에 감세정책과 완전히 상충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공약은 최소한 현재 조세수준에서 불변 또는 증세로만 가능하다. 때문에 증세인 경우에는 노직의 "소유권의 정의의 기준"에서 사회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당은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이다.

셋째, 세금부담의 감면공약은 영국에서 2000년대 초 옛 토리당 정권집행기의 조세정책과 상충되었다. 역사적으로 세금부담은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래 증가되어 왔다. 노동당은 민영화된 공익서비스회사에 초과이윤세 부과,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감면, 근로가계의 소득세 감면은 조세정책에서 분위기 전환을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제도로서 매우 혁신적이었다.

넷째, GDP 대비 조세비율공약은 2000년 초 토리당의 사전 세율삭감공약에 대해서 노동당도 맞불작전으로서 선거 전략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노동당도 전통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경제적 상황에서 GDP 대비 조세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이례적인 공약으로 사실상 보수자유진영이 역사적으로 경제사회적 정의차원에서 GDP 대비 조세비율 주장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는데 사회주의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11) 제3의 길(New Left)은 다시 말해서 뉴 레프트 운동을 말한다.

12) 이때의 관성(慣性)은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로서 보통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관성이 크게 된다. 이처럼 정책적 관성은 정책의 힘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관성=습관성, 타성(惰性)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화정책은 정책적으로 교육, 건강, 복지에 추가적 재정지출을 시도하였다. 노동당은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재분배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 세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상당 액수가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사실상 재분배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노직은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노동당은 “재분배”라는 용어사용을 회피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선거공약의 공론화 유의정책은 1997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적극적이며 극단적 개혁정책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의 목적, 형태, 수준에 대한 폭넓은 공적 토론을 거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노직이 경제적 정의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소유권을 제약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선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선거에서 증세문제를 철저히 회피하려는 전략이었다.

궁극적으로 당시 노동당의 선거공약의 속셈은 1992년 선거에서 당시 존 메이저¹³⁾ 수상과의 선거전에서 스미스(John Smith)의 과도내각에서 주장한 증세문제는 선거패배의 반면교사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선거에서 토리당의 선거광고는 노동당의 스미스 과도내각에서 준비한 부자에 대한 완만한 조세부담의 증세입장에 대해서 “노동당으로부터 국민들은 세금폭탄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악의에 가득 찬 선거캠페인을 낳는 구실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다음으로, 뉴 레프트 운동의 대표로서 영국의 노동당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예민한 증세문제 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화¹⁴⁾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첫째, 조세공약의 중화정책으로서는 1997년 선거에서 페이비안사회주의의 점진적 사회개혁을 선호하였고, 그 실천을 위한 세수입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입장

13) 존 메이저(John Major)는 1990년 11월 28일부터 1997년 5월 2일까지 보수당 정권으로 영국 수상을 역임하였다.

14) 이때의 중화(中和)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섞여 각각의 성질을 잃거나 그 중간의 성질을 띠게 하는 개성과 속성을 잃게 하는 정책이나 사상을 말한다. 현대 정치에서는 여야의 극단적인 고세율에 의한 고복지, 저세율에 의한 저복지 등으로 정책이 중화되고 있다는 논리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표명을 유보하는 새로운 중화정책을 시도하였다. 당시 노동당은 조세정책과 같은 국민적 예민한 사안은 개인,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기조를 유지하였다.

둘째, 국민부담공약의 중화정책으로서는 국민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사고에 대해서 기존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였다. 노동당 진영에서는 정권획득 실패의 주요인이 국민부담이었다는 사실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기조를 유지하였다. 유권자는 노동당에 표를 던짐에 따라 개인적 비용부담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가를 두려워하였다. 이처럼 유권자의 불확실성은 노동당의 경제적 대응 능력에 대해 뿌리 깊은 의구심에 의해서 더욱 복잡해졌다.

셋째, 유권자인식의 중화정책으로서는 노동당이 다시는 고세율 세금정책을 지지한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한다는 점과 당이 유권자의 마음에서 조세문제를 정치적으로 중화시켜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토리당의 노동당공격 에피소드와 교훈에서 얻은 사실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기조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국민부담과 공공서비스부문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정치적 이슈 중 하나로 취급하고, 동일선상의 역학관계 속에서 다루어 중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넷째, 좌파우파 경제사상의 중화정책으로서는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우파와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 등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중화사상을 철저히 개발하여 유권자 결정을 흐리게 하여 표를 유인하는 전략으로 무장하였다. 경제사상의 중화는 어려운 국가정책에 대해서 정당, 정치가, 사상가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춰 보면 이러한 경제사상의 중화 전략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사상의 중화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뉴 레프트 경제사상의 대중 컨센서스정책(交感政策, consensus policy)은 정권 유지에서뿐만 아니라, 중도좌파의 가치와 아이디어라는 장기적 대중합의를 수립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당의 새로운 가치적 경제사상은 20세기가 보수의 시대인 것과 같이 21세기를 진보의 시대로 만들려는 희망을 추구하고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뉴 레프트운동은 이를 위하여

이념적 또는 선거구상의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안정된 시대적 상식선상에서 사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끝으로, 뉴 레프트운동은 국민부담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인식을 흐리려고 하는 매몰전략(埋沒戰略, sunk strategy)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공공정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세는 시민적 인식의 공공정책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이며 공공지출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지닌 양면성이 있다. 시민국가에서는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조세 부담의 경감욕구는 정부의 속성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뉴 레프트운동의 정책목표는 영국의 노동당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미래에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도적인 대중인식 사실을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뉴 레프트운동의 최상목표는 평등은 물론이고, 자유가 공존하는 사회민주주의로서 정부가 적극적 정책과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보다 응집력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제사상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노동당의 조세접근은 명확한 조세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정당의 선거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무엇인가 숨겨지고 위장된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셋째, 뉴 레프트운동의 사회목표는 중도좌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적 가치와 전통적 사회주의의 지지기반으로서 이어져온 국민수용을 철저하게 재인식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실용적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부담이 전달되고,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수용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결국, 뉴 레프트운동의 시험대였던 영국의 1999년 5월 1일 총선거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례로 들 수 가 있겠다.

첫째, 뉴 레프트운동은 조세논쟁에서 당시의 전통 좌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등이 과거의 의도된 산물로서 그 이념이 뿌리 깊게 이어져온 국민부담 증가인식을 철저하게 회피하였다. 당시 보수당의 선거전략은 항상 소득세의 증감세 논쟁이 가장 최선이라는 선거개념을 의도적으로 재차 시도하였다. 국민부담 대립은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세, 이윤세, 에너지세, 기타조세에서 세부담의 적정

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대상이었고, 실용성과 이념성 측면에서 논쟁으로 이어졌다. 뉴 레프트 운동가들은 신자유주의 철학에 의해서 강력히 지지되어 오고 있던 국민부담 논쟁에 대한 정책이슈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둘째, 뉴 레프트운동은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국민부담 사상논쟁 유인에 대해서 시민의식의 전환적 사고로 정권을 획득하려고 국민부담과 공공서비스정책에 일대 인식전환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페이비안사회주의의 정강정책은 조세정책과 공공서비스정책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약으로 정책을 명확히 설정하여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뉴 레프트운동은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시민의식과 대중행동의 지지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국민부담의 감소와 공공서비스 지출의 효율화와 적정화를 시도한다는 인식전환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었다.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탱하였던 조세수준과 공공서비스지출에 대한 사상논쟁은 사회민주주의·페이비안사회주의에서도 시대적인 변화를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영국, 독일과 기타 유럽제국의 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조세와 공공서비스 등의 대안으로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제3의 길로서 뉴 레프트운동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3.2.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 뉴 레프트운동의 정책적 대안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견해를 포괄하는 뉴 레프트운동은 시민권 개념의 평등권¹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마셜(T. H. Marshall)의 평등권 개념인식은 1970년대에 고전적 형태로서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해 평등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권리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능은 전인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셜은 평등권적 기본권리에 대한 표현으로서 *“만약 개인이 가난과 질병이라는 일정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개인은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나 법 앞에서 시민의 평등은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불균등에 의해서 저해된다*라는 평등개념을 주창하였다.

15) 평등권은 각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 경제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기본권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마셜의 평등개념은 개인의 기본권리를 누리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에서부터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민주주의 개념에서 개인은 원자론적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만족에 의존한다.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속성을 가진다. 때문에 개인은 다른 개인에게 겸손하고 협력적이며, 생산 지리적 공간을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화를 준비하는데 평등하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사상으로부터 뉴 레프트운동은 개인의 존재가치와 평등의 개념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주고 있다.

첫째, 소득개념의 인식은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 소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문화, 교육이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사회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얻는다.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들에 둘러 쌓여있다. 또한 우리는 도로, 경찰, 공기정화, 쓰레기 집합, 문화적 생활 등에 의존한다. 우리는 상호의존관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등개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의존의 인식은 시장과정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많은 부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회와 소득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때문에 불공평의 경제사상은 시장에서 성공에 대한 보수로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민의 평등한 가치는 사회민주주의 견지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공평이 고정된다거나, 지나치게 크다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권은 사회적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자원과 기회를 재분배함으로써 불공평을 완화시키도록 국가에 평등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세에서 평등의 가치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으로 신자유주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세는 사유재산의 몰수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출하는 소득의 각 부분은 사회에 진 빚을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조세는 징벌이 아니라 상호간 책임의 표현이며 개인의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최후 보류이다.

케인즈는 "과세는 우리가 쾌적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회원 가입비용(Membership fee)이다"라는 유명한 주장을 하였다. 이때의 회원은 평등한 개인을 칭한다. 뉴 레프트운동에서 조세개념은 민주적 과정의 중심요소이다. 왜냐하면 시민권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공정한 집합적 의사결정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시민권이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재분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결정될 것이 틀림없다.

뉴 레프트운동은 시민권과 조세·공공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민주주의 평등권과 신자유주의자의 자유권 수호의 견해와 철저히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첫째, 뉴 레프트운동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조세사고에 대해서 시민권을 우선하는 인식으로 전환하였다. 조세사고는 신자유주의 자유권 수호와는 다르게, 사회민주주의는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세라고 인식하였으나, 시민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았다. 평등추구의 사회민주주의는 시민권과 조세논의에서 조세수입 보다는 공공서비스지출에 우선하여 시민권을 압도하였다. 뉴 레프트운동은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조세 사고와 태도를 수정하였다.

둘째, 뉴 레프트운동은 시민권과 조세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효율가치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평등사상을 결합하여 시민의식과 시민수준의 형평가치로 과감하게 수정하고 있다. 기존의 시민권과 조세개념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견해는 "도시공동체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시민, 개인과 정당, 개인과 정부, 시민과 정당, 시민과 정부, 정당과 정당, 정부와 정당을 연결하는 인과관계의 효율가치"에서 과세하였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은 "사회유기체(a social organism)로서 사회적 평등과 강력한 정부의 역할"의 개념에서 과세하였던 것이다.

셋째, 뉴 레프트운동은 시민권과 조세개념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재분배기능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조세정책은 살인적인 과세에 의한 정부의 강력한 복지, 후생, 연금, 공공영역의 확대 등 공공서비스 지출개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나 뉴 레프트운동은 이를 개인의 능력을 기초한 세수입과 재분배기능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수정하고 있다.

여기서 포괄적인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정책과 뉴 레프트운동의 정책을 각각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겠다.

우선,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유럽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Old Left)의 기본적 이념과 사상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였다.

<표 2> 전통적 사회민주주의(Old Left)의 강력한 정부역할로서 정책대안

구성부분	정책대안
① 정부부문	·큰 정부, 정부역할 최대화, 광범위한 강력한 개입주의
② 외교부문	·국수적 실리외교, 국지화, 국제평등, 평등주의외교
③ 사회부문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로서의 집산주의 ¹⁶⁾ , 평등성 사회
④ 시민부문	·평등우선, 평등성 추구, 불평등 불인정
⑤ 시장부문	·시장개입주의의 혼합경제, 케인즈식 수요관리정책지지
⑥ 공공부문	·최대한의 공기업과 경영의 평등화, 공영화를 확대
⑦ 공공지출	·세수입수준의 최대화에 의한 최대 공공서비스수행
⑧ 산업부문	·규제강화와 철저한 계획시장, 평등원리
⑨ 사회안전	·복지·연금·의료의 확대, 평등화로 복지안정망구축
⑩ 노동시장	·완전고용으로 경제사회발전 동력정책지지
⑪ 기업부문	·국가기업, 공공기업화, 노동자 절대보호 추구
⑫ 분배가치	·평등주의식분배, 재분배정책실현, 빈부격차해소를 추구

다음으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독일의 슈레더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동정심과 그리움, 정권탈환욕구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념과 정책적 관점을 포괄하고, 21세기 사회주의 시대로 지속화를 위하여 수정사회주의의 제3의 길로서 뉴 레프트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탄생시켰다.

첫째, 뉴 레프트운동은 각 개인의 계발과 기회확대에 바탕을 둔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 뉴 레프트운동은 시민 각자의 권리와 책임에 바탕을 둔 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셋째, 뉴 레프트운동은 지방자치와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정부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넷째, 뉴 레프트운동은 고립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세계화에 바탕을 둔 강한 외교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끝으로,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에 의한 뉴 레프트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

16) 집산주의(集産主義, collectivism)는 토지, 공장, 철도, 광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정부의 관리 아래에 두면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통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경제사상이다. 집산주의는 생산재에서만은 공산주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은 경제사회적 이념과 사상체계로서 “인간 기본을 중시하는 가치사상”과 “변화하는 세계에 순응하는 가치사상” 등으로 분리하여 사상을 정립하였다.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에 의한 뉴 레프트운동은 이처럼 두 가지의 가치사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세세히 사상을 고찰하여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사회적 이념과 사상체계로서 “인간 기본을 중시하는 가치사상”은 다음과 같다. ① 동등한 존엄성의 평등향유의 가치사상이다. ② 모두를 위한 기회균등 제공의 가치사상이다. ③ 모든 경제주체의 책임의식 고취의 가치사상이다. ④ 공동체의식의 평등사회의 가치사상이다.

둘째, 경제사회적 이념과 사상체계로서 “변화하는 세계에 순응하는 가치사상”은 다음과 같다. ① 복잡 다원화된 시장과 문화의 글로벌화이다. ② 다변화된 사회에서의 기술진보와 정보의 확대이다. ③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는 지위향상이다. ④ 정치적 환경과 변화에 진화하는 근본적 변화추구이다.

여기서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에 의한 뉴 레프트운동의 기본적 이념과 사상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였다.

<표 3> 뉴 레프트운동의 강력한 정부역할로서 정책대안

구성부분	정책대안
① 정부부문	·현대적 정부, 공정한 시스템, 지방자치, 분권화, 글로벌화
② 외교부문	·고립주의타파, 국제협력, 세계화, 강력한 참여적 외교
③ 사회부문	·기회균등, 공동체의식 평등가치, 여성의 역할과 현실참여
④ 시민부문	·자기계발기회제공, 평등향유, 시민의식, 동등 존엄성
⑤ 시장부문	·기술진보, 정보확대, 환경변화순응, 시장-문화글로벌화
⑥ 공공부문	·글로벌기술진보, 글로벌공기업화, 시장문화변화에 순응
⑦ 공공지출	·GDP연계 세수입과 공공서비스지출, 재분배기능 최소화
⑧ 산업부문	·역동적 지식기반산업, 산업의 글로벌화, 기술정보제공
⑨ 사회안전	·세수의존의 복지·연금·의료의 연계로 지출적정화
⑩ 노동시장	·책임과 권한의 동력정책지지, 다원화 노동시장인정
⑪ 기업부문	·글로벌 지식기업, 기술진보, 경영글로벌화, 성장동력추구
⑫ 분배가치	·기회균등식분배, 기회제공 및 책임의식, 분배의 정의구현

토니 블레어 수상과 슈레더 총리의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에 의한 뉴 레프트운동은 전통적인 좌파의 비현실적인 경제사상을 스스로 내던지는데서 시작하였다. 제3의 길이므로 토니 블레어 수상과 슈레더 총리는 노조 영향력강화, 주요산

업 공공소유, 사회복지 지출확대, 고소득층에 대한 살인적, 징벌적 과세와 같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였다.

토니 블레어 수상과 슈레더 총리의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은 너무 전통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안사회주의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자유주의 사상을 도입한 수정주의로서 민주주의의 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하여 좌파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에 의한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로서 뉴 레프트운동은 현재진행형으로서 경제사회적 사상으로 서 후대에 깊이 있는 이념과 사상적 고찰과 통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의 분석은 21세기 새로운 경제사상으로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뉴 라이트 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에 대한 탄생배경과 정책대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뉴 라이트운동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영국의 대처수상이 새로운 신자유주의 사상으로서 대처리즘을 주창하였다. 뉴 라이트운동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혁, 최소의 정부, 효율적 자유기업을 제차 강조하고, 경쟁을 위한 효율적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효율적인 사회로의 성공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뉴 레프트운동은 점진적 사회개혁으로서 사회민주주의-페이비안사회주의의 전통적 사회주의 형태에 대해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과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시민의식과 시민주체사상에 의한 제3의 길을 탄생되었다. 뉴 레프트운동은 살인적인 조세부과에 의한 강력한 공공서비스지출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GDP 대비 조세부과와 효율적 공공서비스지출, 각 개인의 자기계발과 기회확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지방자치와 분권화, 국제협력과 세계화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세계적으로 뉴 라이트-레프트운동은 이념과 사상적으로 멀고도 먼 거리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 운동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시민의식, 시민주체에 절대적인 영향과 그들의 사고에서 새로운 개혁사상을 제시한다는 것이 공통의 분모이다. 나아가서 두 경제사상은 뉴 라이트운동의 효율과 뉴 레프트운동의 평등에서 효율은 효율·형평¹⁷⁾으로, 평등은 평등·형평으로 접목하면서 상호 조화와 균형을 토대로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독일의 2006년 총선 후 보수의 우파와 진보의 좌파가 대연정으로 기민당의 앙겔리 메르켈총리 취임하였다.

이처럼 뉴 라이트·레프트운동의 정책대안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집권 열린우리당은 유럽의 살인적인 조세와 공공서비스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세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는 반면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뉴 라이트·레프트운동은 극한적인 조세와 공공서비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우선, 조세정책은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 1조1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청난 세부담의 압박이었다. 이를 테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개발부담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당사자이건, 아니건 간에 국민이라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좌파적 성격의 조세정책은 2006년 공시 아파트 보유세 부담 추정치 재산세와 종부세에서도 잘 파악¹⁸⁾할 수 있겠다.

<표 4> 2006 공시 아파트 보유세부담 추정치 (자료: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아파트명	공시가격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총액
강남 도곡동 독곡렉슬 50평(16층)	19억 2000만원	454만원	951만원	1778만원
강남 역삼동 푸루지오 32평(13층)	7억 8000만원	169만원	81만원	358만원

더욱이 종합부동산세 세수전망으로 2006년 4월 정부는 2006년에는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 발표에 의하면, 종부세의 급증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과표(세금을 매기는 가격기준) 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높

17) 형평은 효율과 평등의 중간으로서 평형(balance) 또는 균형(equilibrium)을 의미한다.

18) 단, 보유세 총액은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포함하고 있다.

아저 증부세가 올해 대비 6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정책은 지속적 확대로 이어져 세수입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채를 2002년 133조에서 2006년 현재 284조로 현 정부출범 4년간 150조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서비스 증가에 의한 국채의 증가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공공서비스 증가는 그 증가가 전통적 사회주의들의 살인적 세금부과를 넘어서 정부착취의 폭탄세레라는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 enter the region of delights)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조세와 공공서비스 증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가들은 2007년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흥미로운 연구대안이 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은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부동산, 통일, 국방,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체육, 교육, 역사 등 모든 부문에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은 정부부문, 외교부문, 사회부문, 시민부문, 시장부문, 공공부문, 공공지출, 산업부문, 사회안전, 노동시장, 기업부문, 분배가치 등의 격차를 시민의식의 논리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서 극한적 충돌과 대립만이 난무하는 이념논쟁과 사상대립으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뉴 라이트·레프트운동에서 효율은 효율·형평으로, 평등은 평등·형평으로 접목하면서 상호 조화균형의 토대를 살리려는 노력"과 "아시아 가치사고로서 더불어 사는 가치사고로서 형평논리"를 주목하여야 한다. 뉴 라이트·레프트운동은 알고 보면 모두가 시민을 위한 천상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마차에서 자유는 앞바퀴의 기능과 평등의 뒷바퀴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앞바퀴는 자유롭게 세상의 많은 길에서 보다 좋은 지름길을 향하여 앞을 보고 달리는 효율기능으로 성장동력을 갖추고, 뒷바퀴는 앞바퀴가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평등기능으로써 속도조정의 분배동력으로의 조화·균형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가장이상적이지 않을까 고려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2006년 한국정부사이트 등등의 각종 국가사이트가 참조되었음.
- 2006년 영국 정부사이트 등등의 각종 국가사이트가 참조되었음.
- <http://en.wikipedia.org>
- [http://en.wikipedia.org/wiki/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List Prime Ministers](http://en.wikipedia.org/wiki/Prime_Minister_of_the_United_Kingdom_List_Prime_Ministers)
- 2006년 일본정부사이트 등등의 각종 국가사이트가 참조되었음.
- 2006년 미국정부사이트 등등의 각종 국가사이트가 참조되었음.
- 2006년 독일정부사이트 등등의 각종 국가사이트가 참조되었음.
- 2006년 프랑스정부사이트 등등의 각종 국가사이트가 참조되었음.
- 각종 국내외 경제학설사, 경제사상사, 경제사, 철학·윤리사상사 등 참조되었음.
- 김승일, 이승영, 주노종 외, 『21세기 동아시아 협력』, 미래인력연구소·넥서스, 1999. 10.
- 강기원, 『교양경제』, 제일출판사, 1997.
- 대한민국정부, 『2004 ~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예산처, 2004.
- 이계식, 배준호, 전성인, 『350만의 드라마』, 중앙M&A, 1998.
- 조기준, 『경제학사』, 일신사, 1952.
- 주노종, “分配市場のもとでレント追求の考察”, 韓教財團論文集, 第 2集, 1994
- 주노종, “效率的な賃金差別のもとでの公正性と努力效果”, 九州大學 經濟論究, 1995.
- 주노종, “公共所有와 私的所有에서의 社會厚生分析”, 교육부 한국 학술진흥재단 박사후의 연수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 Post-Doctor 논문, 1997.
- 주노종, “일본의 21세기를 향한 사회복지시스템의 고찰”, 충북 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 1998.
- 주노종,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차별화사회 고찰”,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port, 제 9 권 2호, 단독발표, 1999. 12,
- 주노종, 『일본 정치·경제 개혁』, 협진문화, 1998.

- 주노중, 『공공정책평가이론』, 협진문화, 2004.
- 주노중, “뉴 라이트운동·뉴 레프트운동의 경제사상적 고찰”,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워킹페이퍼, 2006. 7.
- 주노중, “경제적 정의 경제사상적 고찰”,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워킹페이퍼, 2006. 8.
- 주노중, 『경제사상사 분석과 이해』, 법문사, 2006.
- 최 광, 『현대경제학의 이해』, 비봉출판사, 2004.
- 기타 다수의 한국관련 서적과 논문이 있음
- 鳥 恭彦, 『新マルクス經濟學講座』, 有斐閣ブックス, 2004.
- ビルトッテン, 『文藝春秋』, 日本はアメリカの植民地か!, 1997.
- 岩澤雄司, 『WTO紛争處理』, 三省堂, 1997.
- 野口愁紀雄, 『公共經濟學』, 日本評論社, 1997.
- 荻島國男, 『戦後體制と訣別』, 荻島國男·小山秀夫·山崎泰彦, “年金·醫療福祉政策論”, 社會保險新報社, 1992.
- 貝塚啓明, 『地方財政分析の骨格』, “經濟學論集”, 41卷3号, 1975.
- 城戸喜子, “社會서비스と人的資源”, 社會保障研究所, “21世紀の 社會保障に關にする研究”, 1999.
- 郡司晃篤, “地域福祉と醫療計劃·醫療計劃の基本的諸問題”, “季刊社會保障研究”, 26卷 4号, 1999.
- 細江守紀·大住圭介, 『ミクロ經濟學入門』, 岩波書店, 1996.
- 厚生省 保險局 企畫課, “歐美諸國の醫療保障”, 社會保險法規研究會, 1990.
- 高山憲之, 『資本·經濟』, 東洋經濟新報社, 1992a.
- 高山憲之, “年金改革の構想”, 日本經濟新聞社, 1992b.
- 都村敦子, “租稅と社會保障制度に關にする家族の取扱·家族の變容·勞動の變容の對應”, 金森島田·伊部編, 前掲書, 1992.
- 八田達夫 외1인, “年金改革:市場收益率年金の移轉”, 現代經濟研究編, “日本の政治經濟システム”, 日本經濟新聞社, 1990.
- 內田 義彦, 『新經濟學史講座』, 未來社, 1997.
- 村上清, “厚生年金基金による代行の將來”, 社會報障研究所編, 有斐閣, 1992.
- 中谷巖 외 2人, 『稅制改革による日本經濟』, 東洋經濟新報社, 1998.

- ・宮島洋, 『租税論の展開と日本の税制』, 日本評論社, 1986.
- ・本間正明, 『企業の社会的貢献』, 週刊東洋経済編集部編, “どこに行く日本”, 5章 所収, 東洋経済新報社, 1999.
- ・水野正一, Theodor Dams, 『経済・経営の構造変化と対応策』,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
- ・高城正暁 外2人, 『国際政治経済の基礎知識』, 有斐閣ブックス, 2005.
- ・内田, 義彦, 外2人, “経済学史”, 未来社, 2004.
- ・大住圭介, “経済計画分析”, 牧野書店, 1994.
- ・九州大学 国際経済構造研究会, 『経済・経営構造の国際化比較試論』, 九州大学出版会, 1995.
- ・武野秀樹, 『国民所得論』, 九州大学出版会, 2005.
- ・Arrow K. J.,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II, no,5, December 1963.
- ・Blinder A. S., “Why Is Government in the Pension Business?”, S. M. Wachtered., Social Security and Private Pensions, Lexington Books, 1988.
- ・F. A. von Hayek, 『The Road to Serfdom』, 1944.
- ・Heraldic, B. E., and Katz, M. L., “Moral Hazard and Verifiability : The Effects of Renegotiation in Agency”, *Econometrica* 59 : 1735-1753, 1991.
- ・John F. O’connell., “Welfare Economic Theo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2.
- ・Laffont, J.J., and Tirole, J., “Privatization and Incentiv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7 : 84-105, 1991.
- ・Kelman, S., “Procurement and Public Management”, The AEI press, Washington D.C. 1990.
- ・Pigou A., “socialism versus capitalism”, 1937.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Belnap Press, 1971.
-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 ・Schieber G. J., etal., “U. S. health expenditure performa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data update”, *Health Care Financin Review*, vol. 13,

no. 4, Summer, 1992.

·Schumpeter J., "capitalism, socialism, democracy", 1934.

·_____,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Simon H. d. S., "Système des Industriels", 1821.

·Smith A., "The Wealth of Nations"(1776), New York, modern Libray, 1937.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1759.

·Sombart W., "Der prolotarische Sozialismus", 1924.

·Thompson W.,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Wealt
h", 1824.

·_____, "Esther Lewenthal; The Ricardian Socialists", Columbia, 1911.

·Tirole, J., "Procurement and Renegoti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
: 235-259, 1986.

·Weber M., "Verhältnisse der Landarbeiter im ostelbischen Deutschland",
1892.

·_____, "Wissenschaft als Beruf", 1919.

·_____,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22.

·Weber M.,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21.

·_____, "Max Weber, Ein Lebensbild", 1926.

·Williamson, Oliver E. "Market and Hierarchies : Analysis and Antiturst
Implications", New York : Free.

·기타 다수의 참고문헌이 있음